

공공 기후금융* 정책 평가

진익 경제사업평가과장, 김윤희 사업평가관

“ 한국이 파리협정(신기후체제)을 이행하려면 2021~2030년의 10년간 약 28.6조 원에서 33.7조 원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국내 공공 기후금융은 아직 조성이 미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온 녹색성장 및 자원외교의 성과부진, 주요 당사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 기후금융의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민간부문의 공동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민관협력촉진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기후금융 정책이 일관성 있고 통합적으로 집행되도록 정책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등 안전망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기후금융: 온실가스 완화를 목표로 저탄소·기후복원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금 흐름을 지칭하며, ‘공공 기후금융’은 정부·산하기관의 직·간접 지원과 투자를 모두 포함함.

본 보고서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 공공 기후금융의 규모를 분석하고, 기후금융의 성장가능성을 검토함.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금융 현황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UNFCCC*의 모든 가입국에게 적용됨. 전 세계의 기후변화대응은 파리 협정의 발효(2016.11.4)로 계획단계에서 이행단계로 전환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아직 조성이 미진함.

I. 신기후체제와 기후금융 현황

II.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공공 기후금융 규모

III. 기후금융 성장가능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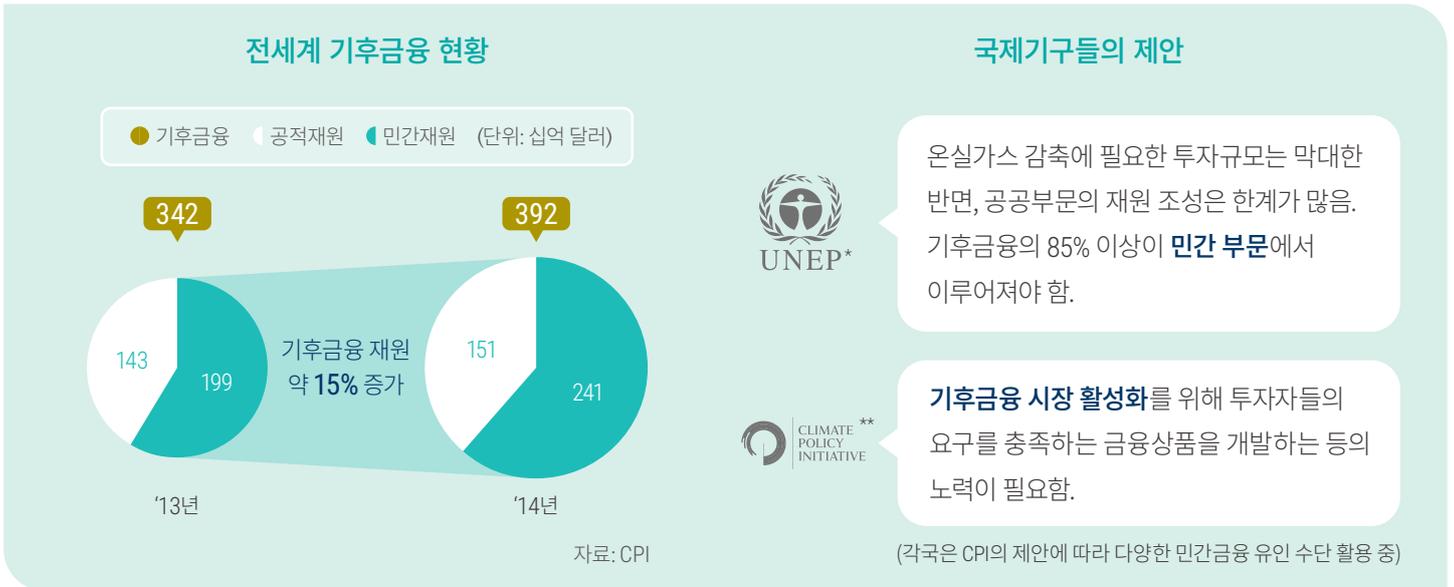
-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평가
-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 평가
-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 평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I. 신기후체제와 기후금융 현황

1. 국제 기후금융 동향 및 개선방향 제안

201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기후금융의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약 15% 증가하였음. 국제기구들은 공공부문 자원 조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간재원의 동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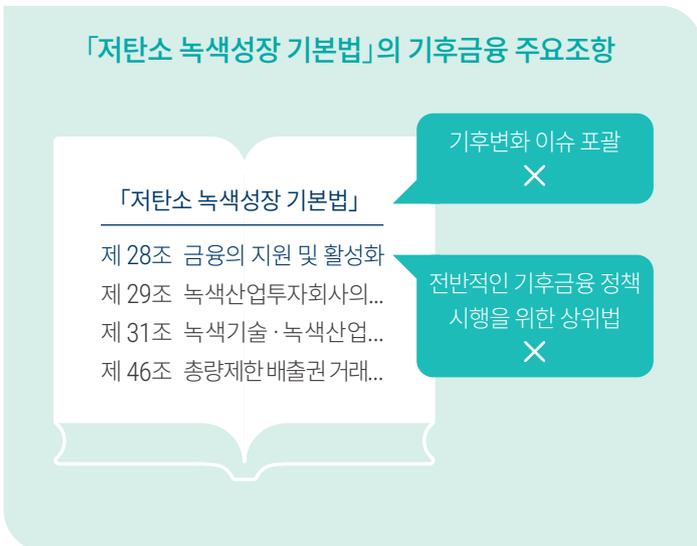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 환경 계획 **CPI(Climae Policy Initiative): 기후정책이니셔티브

2. 국내 기후금융 조성을 위한 법적 체계 및 금융 지원 현황

기후변화 대응 관련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은 기후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이 기후변화 이슈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며, 기후금융의 전반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상위법으로는 범위가 협소함.

한국은 기후금융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미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기후금융의 조성을 주도하고 있으나 녹색산업 정책금융지원은 정체됨.



I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공공 기후금융 규모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정소요는 연간 약 5.94조 원에서 6.45조 원 규모로 추정됨.



*2020 온실가스로드맵 이행과제 관련 부처별 재정사업의 '14~'16년 예산규모 평균

개선방안 공공 기후금융의 자원확보를 위해 기존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보다 큰 규모의 재원은 '(가칭)한국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I. 기후금융 성장가능성 검토

국내 기후금융의 성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을 각각 평가한 결과,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평가

민간부문이 공공 기후금융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공공부문의 지원이 미흡함.



*유인성: 공공 기후금융과 관련한 「정책-계획-프로그램-사업지원」이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참여를 유인하는 정도
 **배출권거래: 국가나 기업이 필요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

2.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 평가

현재의 기후변화 정책은 서로 다른 목표와 추진체계를 가지고 다른 기간 동안 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통합성이 높지 않음.

기후변화정책 추진 현황

정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6년 수립 예정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제1차 ('11~'15년)			제2차 ('16~'20년)			
녹색성장국가전략		제2차 ('14~'18년)					제3차 ('19~'23년)	
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13~'17년)				제3차 ('18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4차 ('14~'35년)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15~'24년						
2020온실가스감축로드맵		'14~'20년						
2030온실가스감축로드맵							'16년 수립 예정	
2050저탄소발전전략						'17년 수립 예정		

*통합성: 기후금융 관련 정책과 사업이 개별 목표를 유지하면서 상위 목표를 위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정도

3.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 평가

수요·공급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민간 기후금융은 일종의 시장실패 상황이며, 민간부문이 기후금융에 참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수단 및 거래비용절감수단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내 기후금융 조성 장애요인

	취지	문제점
환경책임보험	기후환경 리스크 완화 및 전가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
다양한 금융채널	기후환경 사업의 단계별 자금유입 촉진	자산전환기능 취약
녹색인증제도	정보비대칭 해소 및 식별가능성 향상	선별기능, 감시기능 미흡
기관투자자	사회책임투자 선도자 역할 가능	위험관리수단 부족으로 기후금융 참여 기피

*수용성: 자금공급자가 기후금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

개선방안 공공성과 수익성간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민간부문의 공동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민관협력촉진기구(PSF: Private Sector Facility)'를 도입하고, 공공 기후금융 정책이 일관성 있고 통합적으로 집행되도록 정책거버넌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부문이 기후금융에 참여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공공부문과 분담할 수 있도록 각종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망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함.